

기초연금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국민연금 수급가구와의 비교*

장 현 주

국문요약

이 연구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 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의 동시 수급가구,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공제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통제변수의 영향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이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농어촌지역 수급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유일한 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점에서 향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동시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향상소득가설과 재산소득을 통한 생애주기이론이 일부 나타났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비의 불평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어 향후 소비의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저소득가구에 대한 기초연금액 차등화와 가구 소비지출의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성 강화를 제안한다.

주제어: 기초연금, 가구 소비지출, 가구 소득, 국민연금, 향상소득가설, 생애주기이론

I. 서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으나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 의무가입을 실시하여 그 사이 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가입기간 20년을 채워 2008년에 국민연금 중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가입자가 나올 시점이 되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었으며¹⁾ 노인단독가구 기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개편 시 국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2008년 6월까지의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이었으며, 7월 이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확대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민연금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일정 부분 상쇄할 계획이었다(이재정·권혁주, 2016: 366).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18대 대선 공약 이행에 의해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후에야 기초연금 지급액이 A값의 10%로 상향되어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었다(김종예·임현정, 2020: 2). 2018년 9월에는 문재인정부의 19대 대선 공약 이행에 의해 월 최대 2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²⁾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와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노인의 가처분소득 증가, 노인빈곤률 완화 또는 노인의 소비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존 연구들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의 노인빈곤률을 완화하거나 빈곤갭을 줄여 노후빈곤 완화효과가 있음을 제시해 왔다(남상호, 2018; 임완섭, 2016).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여 가처분소득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노인빈곤률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이석민·장효진, 2015).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 규모가 커져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낮추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는 등(원종욱 외, 2015) 부정적 외부효과도 나타났다.

나아가 기존 논의들은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효과를 측정할 때 빈곤의 규모와 심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해 왔다. 그러나 빈곤지표 중심의 논의는 수급자의 실생활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소득 중심의 논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선택에 소득이 유일한 자원이라는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이재정·권혁주, 2016: 368). 오히려 소득보다는 소비, 지출, 생활방식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이 수급자의 복지수준을 더욱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Ringen, 198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소수 연구들은 공적연금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계층의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정세은·박종선, 2000).

이에 이 연구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도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

합계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공제액(2021년 기준 월 98만원)이 반영되어 {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으로 산출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 공제(가구별 2,000만원)와 거주지역별 주거공제가 반영되어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소득환산율(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출된다(보건복지부, 2021).

2)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의 30만원 인상은 저소득 노인층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초연금법 개정(법률 제16241호)에 의해 2019년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0년 1월(법률 제16868호)부터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인정액 하위 40%로 확대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된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공제의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국 기준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추정된 효과에 왜곡이 존재할 수도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노후 주요 공적이전소득원으로 보고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 생활실태를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제17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기초연금의 성격

기초연금은 사회보험과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수급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심사(means test)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에 가까운 제도이다(박정수, 2016: 4; 이채정·권혁주, 2016: 368). 공공부조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로써 사회수당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기초연금액은 소액이라는 점에서 사회수당의 성격도 갖고 있으나, 소득 및 자산심사를 거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수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³⁾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 및 자산심사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국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면서도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목적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빈곤완화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입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침해 및 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 논란이 발생하였고(원종욱 외, 2015),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차등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전액 조세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석재은, 2015)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이 제시되는 등 기초연금이 지난 십여 년 간

3)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3*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부가연금액'이며,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이다(보건복지부, 2021: 9). 즉 연계감액제도에 의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소위 연금정치에 자주 활용되면서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어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이라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지,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윤성주, 2014: 21-22). 기초연금이 전액 조세로 충당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될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침해 및 세대 간 소득이전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2. 후생수준 측정에서 소비지출의 중요성

Ringen(1988)은 빈곤 측정방법을 수급자의 소득, 자원, 능력 등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접근과 소비, 지출, 생활방식 등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접근으로 구분한 후, 직접적인 접근이 개인 또는 가구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는 개인은 소득을 통해 기회와 같은 잠재적인 것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채정·권혁주, 2016: 368). 그러나 소비, 지출, 여가, 생활방식 등을 통해서만 개인 또는 가구의 직접적인 삶의 질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비지출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규모 및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소비지출에는 이미 소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통해 개인 또는 가구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석상훈, 2010).

소득과 소비지출 간 관계에서 Ringen(1988)의 주장은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이 심한 가구소득은 미래 발생할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가구의 소비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하여 결국 가구의 후생수준을 쇠퇴시키지만, 변동이 없는 항상소득은 가구소득과 가구의 소비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가구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Jacobs & Hacker, 2008; Gosselin & Zimmerman, 2008).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소득변화의 탄력도가 높은 일시소득(temporary income)이 아니라 안정적인 항상소득 또는 영구소득(permanent income)이다(Ando & Modigliani, 1963; Friedman, 1957). 따라서 가구 소비는 항상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며 일시소득의 변화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⁴⁾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증감에 따라 소비의 불평등을 구분하여 일시소득이 아닌 항상

4) 만약 소득변동이 모두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지만,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영(0)에 가까워 일시소득 변동이 클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에 비해 작게 추정된다(김대일, 2015: 27). 한편, 생애주기이론에서 발전한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Shefrin & Thaler, 1988)은 가처분소득의 원천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고 전제하기 때문에(정세은·박종선, 2020: 5)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특히 행동학적 생애주기이론은 부(wealth)가 현재 소득, 현재 자산 및 미래 소득으로 구성되고, 가구의 신용이 없는 경우에도 부의 구성요소는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소비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해 가장 크며, 미래 소득에 대해서는 가장 적다고 설명한다(Shefrin & Thaler, 1988: 625-629).

소득이 개인 또는 가구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서영빈·송헌재, 2015; Keeler et al., 1985).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소득 구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비의 불평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김대일, 2015: 27).

생애주기이론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현재 소득, 미래 소득뿐 아니라 과거에 축적한 자산가치에 의해 설명하는 가설로서 개인 또는 가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에 변동이 있더라도 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Modigliani & Ando, 1957; Modigliani & Brumberg, 1954).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 소비 및 미래 소비를 위한 소득원으로서 저축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변동성이 있는 소득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 간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저축(savings) 또는 대출(borrowing)을 이용하여 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김현수·석상훈, 2013: 137; Modigliani & Ando, 1957: 415). 즉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부채를 활용하여 소비를 유지하며, 소득이 많은 중장년기에는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자산을 활용하여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Laitner & Silverman, 2005). 항상소득가설과 같이, 생애주기이론에서도 항상소득이 개인 또는 가구의 소비에 영향을 주며,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공적연금 중심의 항상소득이 증가하는 노인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석상훈·김현수, 2013).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을 소비지출에 적용하여 논의할 때, 기존 연구들은 은퇴 이후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가 어떤 소득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균등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은퇴 이후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인 은퇴·소비 퍼즐 현상에 주목해 왔다. 즉 은퇴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Banks et al., 1998; Hamermesh, 1984; Laitner & Silverman, 2005), 특히 자발적 은퇴를 할 경우에 비해 비자발적 은퇴를 할 경우 부정적인 자산 충격에 의해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Smith, 2004). 은퇴·소비 퍼즐 현상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윤재호·김현정(2011)에 따르면,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약 9% 감소시켰으며 자산 분위 최하위 계층에서는 소비지출을 약 1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2011)도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비 증가 유인이 큰 반면, 연령이 높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소비가 감소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결국 두 가설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도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백학영, 2010). 따라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을 통해 은퇴 이후 소비감소 현상을 논의하는 것은 소비감소가 중고령 가구, 특히 노인가구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감소에 영향을 주는 소득을 찾아 이들의 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Meyer & Sullivan, 2003). 나아가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규명하는 것은 결국 소비가 개인 또는 가구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함축한다.

3. 기존 연구들의 논의

기존 연구들은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에 관해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많은 연구들이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으나(예, 남상호, 2018; 임완섭, 2016; 정세은·박종선, 2020 등), 일부 연구들은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여 노인가구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개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예, 박정수·김준기, 2015; 이채정·권혁주, 2016, 이주현 외, 2018 등). 특히 이 연구들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사적이전소득이 감소되어 소득 증가 효과가 없거나 또는 소득이 증가해도 노인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지출 확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전체 노인집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대체로 빈곤율과 빈곤갭을 줄이고 있지만, 연령·성에 따른 노인집단 유형 또는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 완화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수정·박희란(2018)은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75세 이상 노인집단에 비해 65세 이상~75세 이하 노인집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 격차 완화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선호도 차이와 성별 근로소득 차이로 인해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지훈·강욱모(2020)는 기초연금을 통한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 및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가 독거노인가구에게서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시행 후에도 노인부부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독거노인가구보다 높게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수급대상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 기본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 완화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이채정·탁현우(2018)는 노인 가구주 가구에서 성별·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빈곤격차가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재산의 기본공제액 차등 적용방식으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0%로 상향되어 월 지급액이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통한 노인가구의 소득 또는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일부 연구는 기초연금이 가구소득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추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이주현 외(2018)는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가구 소비지출과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액일 많을수록 가구소득 증가가 유의한 반면, 소비지출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근로소득 또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중예·금현섭(2018)은 오히려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기

초연금 수급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지녀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구소득 증가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화·문상호(2014)는 기초연금의 소득증가 효과는 월 평균 지출이 90만원 이하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내에서 유의하였고,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모두 비수급집단에서만 유의한 반면, 수급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에 의한 소득증가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를 가구소득 증가 여부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연금 또는 공적연금의 정책효과 추정 시 Ringen(1988)의 주장을 토대로 가구소득보다는 소비 또는 지출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후생수준 측정에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이채정·권혁주(2016)는 Ringen(1988)의 전제 하에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초연금 시행 초기에 기초연금이 아직 노인의 생활비 지출 변화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빈곤층 노인으로 집중하여 연금액을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차등화를 제안하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세은·박종선(2000)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며,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소비행동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를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한 임완섭(2016)은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10.0%p)과 빈곤갭(3.3%p)을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낮춰 노인 빈곤의 규모와 심도 완화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소득 적용 빈곤 감소 추이에 비해 소비지출 적용 빈곤 감소 추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뿐 아니라 노인의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과 수급자의 소비지출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소비성향의 차이, 수급액 규모에 관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 연구들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비성향이 크거나 공적연금 수급액 규모가 작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예컨대, 강성호·임병인(2011)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소비성향이 클 확률이 높아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유인이 큰 것으로 보면서 공적연금이 소비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노인가구에서 고정적 소득이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소비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고정적 소득 발생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비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현주(2019)는 국민연금의 낮은 월 평균 수급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빈·송헌재(2015)도 중고령 가구는 공적연금보다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여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구소비지출의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결국 기존 연구들은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효과에 주목하여 기초연금의 거시적 정책효과를 논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이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소수의 연구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기초연금의 미시적 정책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거시적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집단의 빈곤 규모와 심도를 완화하였지만, 노인집단별 빈곤 완화효과는 상이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미시적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연금 지급가구의 소득 외 소비지출과 기초연금 또는 공적연금 간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 지급가구의 복지수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효과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의 동시 지급여부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에 의한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대다수 고령자 가계에서 중요한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정예은·박종선, 2000). 기초연금은 시행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기초연금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때 기초연금만 지급하는 가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가구, 국민연금만을 지급하는 가구로 구분한 후 기초연금 지급이 세 집단의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여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 생활실태, 경제활동실태, 복지욕구 등을 2022년에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제17차 자료 중 가구용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종속변수로는 가구소득을 대표하는 가처분소득, 가구 소비지출을 대표하는 총 생활비 및 세부 소비지출비로 설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총 생활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 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와 같은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비동거 가족, 친인척에게 준 금액을 의미하는 소득이전지출 및 세금 납부액, 사회보장부담금액(건강보험료 등) 등의 비소비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소득이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증가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구 소비지출을 정확히 파악

5) 경제활동실태에 관한 국민노후보장패널, 한국노동패널 등의 자료들은 항목별 세부 소비지출비와 세부 소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한국복지패널이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었다.

하기 위해서는 총 생활비에서 소득이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총 생활비에서 소득이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비용을 가구 소비지출금액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세부 소비지출비 중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지출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성격이 유사한 소비지출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거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먼저 식료품비를 식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월세와 주거관리비 중심인 주거비에 주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광열수도비를 포함하였으며, 보건의료비를 의료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통비와 통신비를 통합하였다.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는 타 소비지출보다 중요도가 낮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를 세부 소비지출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설정 과정에서는 가구원 수에 의한 가구소득과 가구 소비지출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처분소득, 총 생활비 및 세부 소비지출비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가구균등화 세부 소비지출비(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초연금 연간소득액과 국민연금 연간소득액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구주의 성, 연령, 거주지역,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 가구구분 및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자산심사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산출 시 신청자의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주거공제를 기본재산액으로 차등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한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⁶⁾ 거주지역에 따른 가구소득과 가구 소비지출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5개 권역별 지역 구분(서울시,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을 2021년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서울시, 광역시, 도농복합군을 대도시로(준거집단=0), 시를 중소도시로, 군을 농어촌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⁷⁾ 재산소득은 가구 단위로 조사되는 이자·배당금 연간소득, 임대료 연간소득, 기타(자격등 대여 등) 연간소득을 합산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아닌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연간 소득금액을 합산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6)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하여 일반재산에 공제하고 있는데, 주거공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21: 73).

7) 2021년 기준,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의미하고(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을 의미한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21: 73).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독립변수	ln기초연금 수급액	가구의 기초연금 연간 수급액(만원)
	ln국민연금 수급액	가구의 국민연금 연간 수급액(만원)
통제변수	가구주의 성	더미변수(남=0, 여=1)
	가구주의 연령	2021-출생년도
	거주지역	더미변수(대도시=0,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구분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일반=0, 저소득=1)
	가구원 수	평균(명)
	ln재산소득	가구의 이자·배당금 연간소득, 임대료 연간소득, 기타(자격등 대여 등) 연간 소득의 합(만원)
	ln사적이전소득	가구원이 아닌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연간 합(만원)
종속변수	ln균등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가구원 수)(만원)
	ln균등화 총 월 소비지출	{(월 생활비-사적이전소득-비소비지출)/√가구원 수}(만원)
	ln균등화 식비	{(가정식비+외식비+주류·담배비)/√가구원 수}(만원)
	ln균등화 주거비	{(월세+주거관리비+수도비+난방비)/√가구원 수}(만원)
	ln균등화 의료비	(보건의료비/√가구원 수)(만원)
	ln균등화 교통통신비	{(가정식비+외식비+주류·담배비)/√가구원 수}(만원)

2. 분석방법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공적연금 수급액 변수들의 정규성 분포 여부를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아 이들 변수들을 모두 자연로그(log)로 변환한 후 다시 정규성 분포 검정을 한 결과 모두 정규성 분포를 충족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변수, 독립변수인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통제변수 중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금액 모두 자연로그로 변환되었다. 이 연구는 세 집단별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가구균등화 월평균 소비지출, 가구균등화 세부 소비지출(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된 3개의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통제변수인 노년기 재산소득을 항상소득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변동성이 높아 일시소득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통해 회귀모형에서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영향을 분석할 때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의 영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지역 더미변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거주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거공제가 가구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회귀모형에서 파악할 수 있다. 3개의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1): $Y1_j = \alpha_j + \beta0_j(\text{가구주 연령}) + \beta1_j(\text{여성dummy}) + \beta2_j(\text{중소도시dummy}) + \beta3_j(\text{농어촌 dummy}) + \beta4_j(\text{저소득가구dummy}) + \beta5_j(\text{ln재산소득}) + \beta6_j(\text{ln사적이전소득}) + \beta7_j(\text{ln기초 연금소득}) + e_j$ (j=기초연금만 수급)

(산식2): $Y2_j = \alpha_j + \beta0_j(\text{가구주 연령}) + \beta1_j(\text{여성dummy}) + \beta2_j(\text{중소도시dummy}) + \beta3_j(\text{농어촌 dummy}) + \beta4_j(\text{저소득가구dummy}) + \beta5_j(\text{ln재산소득}) + \beta6_j(\text{ln사적이전소득}) + \beta7_j(\text{ln기초 연금소득}) + \beta8_j(\text{ln국민연금소득}) + e_j$ (j=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

(산식3): $Y3_j = \alpha_j + \beta0_j(\text{가구주 연령}) + \beta1_j(\text{여성dummy}) + \beta2_j(\text{중소도시dummy}) + \beta3_j(\text{농어촌 dummy}) + \beta4_j(\text{저소득가구dummy}) + \beta5_j(\text{ln재산소득}) + \beta6_j(\text{ln사적이전소득}) + \beta7_j(\text{ln기초 연금소득}) + \beta8_j(\text{ln국민연금소득}) + e_j$ (j=국민연금만 수급)

$Y_j = \ln$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 \ln 가구균등화월평균소비지출, \ln 가구균등화월평균식비, \ln 가구균등화월평균주거비, \ln 가구균등화월평균의료비, \ln 가구균등화월평균교통통신비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가구별 특성 비교

〈표 2〉는 기초연금 수급가구,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 국민연금 수급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경제적 상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 가구주의 연령(77.18세)과 여성 가구주 비율(60.8%)이 가장 높고, 평균 가구원 수(1.53명)는 가장 적으며, 저소득가구가 82.4%로 가장 많다. 반면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로 갈수록 평균 가구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구주의 연령, 여성 가구주 비율 및 저소득가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의 거주지역 비중은 중소도시-대도시-농어촌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거주지역 비중은 주거공제인 기본재산액 규모가 가장 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순으로 나타나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약 77.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각 가구들의 경제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가구 단위로 측정된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연 평균 재산소득이 약 45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의 연 평균 재산소득은 약 90만원이며,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연 평균 재산소득은 약 59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연 평균 재산소득과 반대로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별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특히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 간 차이는 거의 없다. 연 평

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 규모는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 약 392만원이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 약 425만원으로 나타나 두 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에서 약 33만원 더 크다. 연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 규모는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수급액(약 621만원)이 두 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의 수급액(약 364만원) 대비 약 1.7배 규모이다.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수급가구 간 경제적 상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연 평균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약 1,479만원으로 가구의 총 가처분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대비 약 75%, 국민연금 수급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대비 약 46%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 평균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약 107만원)이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대비 약 82.3%, 국민연금 수급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대비 약 54.8%인 것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월 평균 소비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 중 식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지출이 가장 적으며, 주거비 지출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의 주거비 지출보다 약간 더 많다. 각 가구 간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차이는 저소득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열악한 경제적 상태를 함축해서 보여준다.

〈표 2〉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가구의 특성

구분		기초연금만 수급	기초+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가구주 연령(평균)		77.18세	74.27세	67.83세
가구주 성	남	697명(39.2%)	1,143명(59.2%)	619명(74.9%)
	여	1,081명(60.8%)	789명(40.8%)	207명(25.1%)
거주지역	대도시	710명(39.9%)	675명(34.9%)	367명(44.4%)
	중소도시	669명(37.6%)	751명(38.9%)	332명(40.2%)
	농어촌	399명(22.4%)	506명(26.2%)	127명(15.4%)
가구구분	일반가구	313가구(17.6%)	700가구(36.2%)	608가구(73.6%)
	저소득가구	1,465가구(82.4%)	1,232가구(63.8%)	218가구(26.4%)
가구원 수(평균)		1.53명	1.79명	2.06명
재산소득(평균)		44.99만원	90.13만원	593.25만원
사적이전소득(평균)		404.10만원	401.85만원	337.48만원
기초연금 수급액(평균)		392.90만원	425.72만원	
국민연금 수급액(평균)			364.51만원	621.61만원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1,479.56만원	1,957.03만원	3,203.19만원
가구균등화 월 소비지출		107.42만원	130.45만원	196.02만원
가구균등화 식비		39.16만원	43.67만원	56.70만원
가구균등화 주거비		21.76만원	21.24만원	24.42만원
가구균등화 의료비		14.84만원	19.90만원	19.38만원
가구균등화 교통통신비		10.45만원	14.54만원	29.50만원
계		1,778명	1,932명	826명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각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과 가구균등화 월 평균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였다.⁸⁾ <표 3>을 보면, 각 가구가 수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저소득가구일수록 가처분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하지만,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가구일수록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이 가구 총소득 중 세금, 이자지급 등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급여, 연금 등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가구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고 주거공제로 인한 소득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키운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는데, 두 가구 모두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1% 증가할 때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약 0.094% 증가하고, 재산소득이 약 1% 증가할 때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약 0.023% 증가하는 등 사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증가 시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의 가처분소득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났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도 가처분소득 증가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액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가구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의 수급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유의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급액이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여전히 1인당 최대 30여 만원 수준이며,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국민연금의 낮은 수급액의 영향 때문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되는 영향도 일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

구분	기초연금만 수급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B	Beta	B	Beta	B	Beta
(상수항)	8.658***		7.430***		8.753***	
연령	-.012***	-.221	-.009***	-.154	-.017***	-.197

8) 세 회귀모형에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분산팽창지수(VIF)는 10 이하,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dummy	-.087*	-.082	-.044	-.042	-.089	-.060
중소도시dummy	.082*	.074	.057*	.055	.047	.039
농어촌dummy	.059	.051	.050	.048	.124*	.080
저소득가구dummy	-.776***	-.658	-.675***	-.681	-.943***	-.668
ln재산소득	.023*	.062	.018**	.055	.035**	.097
ln사적이전소득	.094***	.185	.058***	.120	.013	.024
ln기초연금	-.084	-.049	.034	.025		
ln국민연금			.098***	.118	.050	.057
F	94.768***		181.991***		94.337***	
R ²	.688		.667		.603	
Adj. R ²	.681		.664		.597	

***p<.001, **p<.01, *p<.05

〈표 4〉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구 월 평균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가구주 연령, 성, 농어촌지역, 저소득가구 및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저소득가구일수록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1% 증가할 때 월 평균 소비지출이 약 0.083%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12개월로 환산 시 연 평균 약 1% 증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이 아닌 사적이전소득의 증가가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성, 저소득가구 외 국민연금 수급액,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료 수입 등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도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가구 월 소비지출이 약 0.06%(연 평균 0.72%)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가구 월 소비지출이 약 .08%(연 평균 0.96%)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액 규모가 연 평균 약 392만원으로 연 평균 사적이전소득인 404만원보다 적으며, 연 평균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인 1,289만원(월 평균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107만원*12개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규모가 조금 더 큰 사적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항상소득가설과 일정 수준의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년기에는 자산을 활용하여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액 규모(연 평균 약 425만원)가 재산소득(약 90만원), 사적이전소득(약 401만원) 및 국민연금 수급액 규모(연 평균 약 364만원)보다 큰 편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액 규모의 약 86%~94%를 차지하는 소득원이 복수로 존재하고, 재산소

득도 기초연금 수급가구보다 많아 타 소득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비록 월 평균 소비지출 규모(약 196만원)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약 107만원) 대비 약 1.8배,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약 130만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며, 사적이전소득(약 337만원) 규모가 타 가구에 비해 적지만, 연 평균 재산소득(약 593만원)과 국민연금 수급액(약 621만원) 규모가 타 가구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사실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에서는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소득원들이 가구 세부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그 상세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구분	기초연금만 수급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B	Beta	B	Beta	B	Beta
(상수항)	6.098***		5.482***		5.814***	
연령	-.014***	-.322	-.014***	-.258	-.022***	-.349
여성dummy	-.084*	-.094	-.096***	-.107	-.176***	-.154
중소도시dummy	-.005	-.005	-.036	-.041	.049	.053
농어촌dummy	-.087*	-.090	-.079**	-.088	-.031	-.026
저소득가구dummy	-.460***	-.461	-.322***	-.379	-.272***	-.257
ln재산소득	.009	.029	.027**	.093	.041***	.149
ln사적이전소득	.083***	.195	.087***	.208	.053**	.129
ln기초연금	-.070	-.049	-.055	-.047		
ln국민연금			.061**	.085	.086**	.130
F	48.362***		67.811***		31.141***	
R ²	.529		.426		.330	
Adj. R ²	.518		.420		.320	

***p<.001, **p<.01, *p<.05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가구의 세부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표 5〉는 가구 세부 소비지출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의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든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 지출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성,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어떤 소득원도 식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서도 가구주 연령을 제외하고 주거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소득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21년 기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비록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없으나 회귀계수가 음수라는 점은 기초연금 수급이 오히려 가구 식비와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공적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은퇴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한다는 은퇴·소비 퍼즐 현상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저소득가구일수록 식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식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거비에서는 대도시 또는 농어촌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고, 저소득가구일수록 주거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무엇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가구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 지출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식비 지출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산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비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의 식비 지출에서는 자산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는 생애주기이론이 확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액의 영향을 통해 은퇴·소비 퍼즐 현상도 일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성, 농어촌지역, 저소득가구의 부(-)의 영향 외 재산소득이 식비 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거비 지출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사적이전소득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의 식비 지출에서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비 지출에서는 국민연금 외 일시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도 존재하고 있어 항상소득가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 식비와 주거비에 미친 영향

구분	기초연금만 수급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식비(B)	주거비(B)	식비(B)	주거비(B)	식비(B)	주거비(B)
(상수항)	4.786***	3.904***	4.651***	2.392***	4.199***	1.472**
연령	-.006***	-.010**	-.007***	.003	-.007**	.004
여성dummy	-.122***	.089	-.093***	.064	-.139***	.107
중소도시dummy	-.021	.039	-.072**	.132**	-.010	.123*
농어촌dummy	-.039	-.068	-.124***	-.011	-.109**	.180**
저소득가구dummy	-.303***	.051	-.208***	-.081*	-.212***	-.070
ln재산소득	.009	.001	.013*	-.016	.034***	.028
ln사적이전소득	.020	.048	.004	.067***	.007	.050*
ln기초연금	-.077	-.106	-.056*	-.051		
ln국민연금			.025	.048	.025	.125**
F	27.941***	2.566*	43.751***	4.208***	21.140***	3.377**
R ²	.393	.056	.324	.044	.251	.051
Adj. R ²	.379	.034	.316	.034	.239	.036

***p<.001, **p<.01, *p<.05

〈표 6〉은 각 가구에서 가구주 평균 연령이 약 67세~77세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가구 소비지출에서 매우 중요하며, 교통통신비의 비중도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이 각 가구의 의료비와 교통통신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 모두 사적이전소득이 의료비 지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식비, 주거비 지출과 동일하게 교통통신비 지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술한 <표 4>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항목은 가구의 소비지출 중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의료비 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성, 저소득가구의 부(-)의 영향 외, 국민연금 수급액이 교통통신비 지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소한 교통통신비 지출에서는 항상소득가설이 성립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아 경제활동 또는 비경제활동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출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 중 식비 다음으로 높는데, 교통통신비 지출에 대해서는 재산소득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통통신비 지출에는 항상소득인 국민연금 수급액의 영향과 자산인 재산소득의 영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표 6>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이 가구 의료비와 교통통신비에 미친 영향

구분	기초연금만 수급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의료비(B)	교통통신비(B)	의료비(B)	교통통신비(B)	의료비(B)	교통통신비(B)
(상수항)	-.607	5.299***	.165	3.956***	1.801*	5.194***
연령	.010	-.033***	-.006	-.028***	.001	-.046***
여성dummy	-.046	-.421***	-.130	-.455***	.136	-.576***
중소도시dummy	.029	.234**	.030	.093	-.062	.215**
농어촌dummy	-.044	.279***	.032	.072	-.243*	.317**
저소득가구dummy	-.454**	-.642***	-.088	-.487***	-.091	-.335***
ln재산소득	-.033	.007	.034	.019	.041	.052*
ln사적이전소득	.169**	.003	.280***	-.020	.113**	-.014
ln기초연금	.293	-.033	.119	.020		
ln국민연금			.095	.131**	-.005	.141**
F	3.534**	56.357***	10.005***	52.338***	2.353*	32.217***
R ²	.076	.567	.099	.364	.036	.338
Adj. R ²	.054	.556	.089	.357	.021	.327

***p<.001, **p<.01, *p<.05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보다 다양한 소득원을 갖고 있고 소득원별 규모도 큰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식비와 교통통신비 지출 등 일부 소비지출에서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자산이 소비지출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항상소득인 기초연금 수급액 규모가 노년기에 일정 수준의 소비지출을 유지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비록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자산이 존재하여 가처분소득 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기의 소비지출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로 인해 가구 소비지출 유지를 위한 사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적이전소득이 변동성이 높은 일시소득이라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비지출을 통한 효용은 타 가구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항상소득을 통한 가구 간 소비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기초연금은 2014년 시행 이후 지급액이 점차 확대되면서 근로능력 한계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제한된 노동시장 참여로 충분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공적이전소득원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수급가구의 소득 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이 기초연금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통한 이중차이분석 등 제도 시행 전후 소득 변화 또는 빈곤상태 변화를 주로 추정함으로써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와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가구와의 소득 외 소비지출 격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이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 수급가구일수록 가구 소비지출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나아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유일한 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이며,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지출 중 의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결국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비지출 중 식비 지출 감소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등 기초연금의 소비지출 진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동시 수급가구에서 국민연금이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교통통신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산소득이 가구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항상소득가설과 재산소득을 통한 생애주기이론이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과 재산소득이 가구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식비·교통통신비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비교적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석민·장효진(2015), 이주현 외(2018)의 연구와는 달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대신, 오히려 기초연금의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의 유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도시 수급가구에 비해 농어촌 수급가구의 가구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중소도시 수급가구의 가구소득은 증가하는 등 거주지역에 따른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 대비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두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에서

는 향상소득에 의한 소비지출이 나타나지 않아 소비지출의 효용이 낮은 편이며, 특히 노후 소비지출 중 중요도가 높은 의료비와 식비 지출에 향상소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곧 세 집단 간 소비의 불평등이 의료비와 식비 지출에 크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국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 및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 비해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비의 불평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어 소비의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향후 공적연금 개편 시 노인의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가구 소비지출의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여전히 확대 기초에 있으나, 모든 수급자에 대한 일괄 확대보다는 하위 40%를 대상으로 차등화하여 확대하는 것이 소비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균등화 경상소득 중위 60% 기준 농어촌지역 저소득가구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농어촌지역 저소득 수급가구가 직면한 소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구 소비지출의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 불가피한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성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가구 소비지출에서 사적이전소득보다 공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시 최대 50%인 감액비율 완화를 통해 저소득 수급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을 개선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부담률 외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가구 소득 외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였으나, 근로소득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급여액이 소수의 가구에서만 발생하고 있었으나, 일부 가구원에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추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횡단적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의 효과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패널분석과 통제변수의 확대를 통해 보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호·임병인. (2011). 연금자산 존재 및 형태의 노인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효과. 『경제연구』, 29(1): 87-114.
- 금종예·금현섭. (2018).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25-53.
- 금종예·임현정. (2020). 기초연금 대응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4(1): 1-24.
- 김경아. (2011). 중·고령자가구의 가구소비 여력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31(3): 573-590.

- 김대일.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노동경제논집」, 38(2): 25-58.
- 김지훈·강옥모. (2020).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사회과학연구」, 31(3): 127-14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현수·석상훈. (2013). 중·고령자의 은퇴리스크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보장연구」, 29(2): 135-165.
- 남상호. (2018).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29(1): 143-177.
- 박정수·김준기. (2015).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및 생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인 가구의 65세 전후 회귀단절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45-370.
- 백학영. (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911-931.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서영빈·송헌재. (2015).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 연구」, 8(3): 119-147.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335-357.
- 석상훈·김현수. (2013). 연금연구: 중, 고령자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연금연구」, 3(1): 113-133.
- 석재은. (2015).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35(2): 94-99.
- 윤성주. (2014).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재정포럼」, 211(2014년 1월호): 8-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재호·김현정. (2011). 은퇴와 가계소비 간 관계 분석. 「경제연구」, 17(1): 1-44.
- 이정화·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0.
- 이주현 외. (2018).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 75-105.
- 이채정·권혁주. (2016).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365-388.
- 이채정·탁현우. (2018).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 25-52.
- 임완섭. (2016).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236: 82-97.
- 장현주. (2019).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8(1): 305-328.
- 정세은·박종선. (200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예산정책연구」, 9(4): 1-29.
- 허수정·박희란. (2018).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179-200.
- Ando, A. K.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Banks, J., Blundell, R., & Tanner, S. (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8(4): 769-788.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sselin, P. & Zimmerman, S. (2008). Trends in Income Volatility and Risk, 1970-2004. Urban Institute Working Paper, May.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Hamermesh, D. S. (1984). Life-Cycle Effects on Consumption and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 353-370.
- Jacobs, E. & Hacker, J. (2008). The Rising Instability of American Family Incomes, 1969-2004: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Briefing Paper 213). Economic Policy Institute.
- Keeler, J. P., James, W. L., & Abdel-Ghany, M. (1985). The Relative Size of Windfall Income and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3(3): 209-215.
- Laitner J., & Silverman, D. (2005). Estimating Life-Cycle Parameters from Consumption Behavior at Retire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116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eyer, B. D. & Sullivan, J. X. (2003). Measuring the Well-Being of the Poor Using Income and Consump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Special Issue): 1180-1220.
- Modigliani, F. & Ando, A. K. (1957). Test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Comments and Suggestion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2): 99-124.
- Modigliani, F. & Brumberg, R.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The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pp. 388-436.
- Ringen, S. (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351-365.
- Shefrin, H. M. & Thaler, R. H. (1988).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4): 609-643.

장현주(張鉉周):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5),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거버넌스, 복지정책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2023)”, “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의 담론분석(2023, 공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 분석(2022, 공저)” 등이 있다.(hjchang@hufs.ac.kr)

Abstract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A comparison with households receiving national pension

Chang, Hyunjoo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basic pension affects consumption expenditure other than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as the amount of payment is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whether or not the national pension is received, and as the amount of payment increases. To this end, households receiving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were set as the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of the control variable due to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housing deduction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was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sic pen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in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basic pension and households receiving both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whil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rural are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the national pen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n particular, in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life cycle hypothesis did not appear because the only source of income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was private transfer.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through property income appeared partially in households receiving both pensions and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After all, because consumption inequality is greater than income inequality in basic pension recipient households, how to improve consumption inequality in the future is more important. It is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amount of the basic pension for low-income households in rural areas and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of the public pension to increase the dependenc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n the public pension.

Key Words: Basic Incom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Household Income, National Pension, Permanent Income Hypothesis, Life Cycle Theory